

S. E. Bernard Prague

1963년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E.N.A를 졸업하고 뉴델리 상무관, U.N. 주재 공관원, 프랑스 상무부, 로스앤젤레스 주재 상무관, 대외 무역부 장관비서, EEC 프랑스 위원회 상무관, 하원 경제분과 위원장, EEC프랑스 위원회 상무장관 등을 역임. 1991년 4월부터 주한 프랑스 대사로 재임중임.

통합유럽 내에서의 프랑스

베르나르 프라그
주한 프랑스 대사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저는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몇몇 사람들로 부터 통합유럽 건설에 대한 일종의 회의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인들은 유럽의 거의 전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통합의 요구'를 과소평가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한 요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났습니다. 약간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던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적 운명의 연속성 속에 생긴 내적 균열과 단절을 느꼈으며, 아울러 그들 국가중 몇몇은 국가로서의 정통성에 가해진 어찌면 치유될 수 없을 손실을 느끼며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단일화를 향한 발걸음은 쇠약해져 가는 국가적 이상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혹은 일종의 구원으로서 체험되었던 셈입니다.

특별히 불란서에 국한시켜 볼 때,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내적 균열'은 전쟁 이후 단 한번도 사라진 적은 없었지만, 종전과 더불어 드골주의의 영웅적 서사시들이 프랑스에 물고 온 승리의 특권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거의 20년 동안 유럽통합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는 모호하고 주저하는듯이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년대 초, 로베르 슈만과 장 모네라는 두 선구자들로부터 유럽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후에, 유럽 방위 공동체 계획에 대한 거부에 이어 드골정부가 각종 유럽 기구들을 보이콧했던 소위 '텅 빈 의석'이라는 위기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골 장군 집권의 마지막 몇년 이후, 또한 그의 후임자들의 집권 하에서는 더욱 더, 프랑스 식민제국의 상실과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점증하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프랑스는 유럽에 대한 흥미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의 이상에서 잠시 멀어진 듯이 보였던 프랑스인들은 역설적이게도 특별히 야심찬 '유럽계획'을 옹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 역시 각기 고유한 야심에 기초하여, 통합유럽 건설이 지향해야 할 바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몇몇 구상들을 수립하였는데 이점이 아마도 한국의 동료들이 회의를 보이는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분히 단순화하는 감이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구상들, 다양한 비전을 둘 개의 커다란 범주로 다시 묶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 구상은 특별히 프랑스가 옹호하는 것인데, 한때는 '유럽제국 구상 la conception impériale de l'Europe'이라고 비꼬듯이 불리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각 국가들의 전통적 특질들을 통합유럽 안으로 옮겨 놓고 영토의 개념과 강력한 결정중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상은 북유럽의 국가들(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에 의해 옹호된 것인데 좀 더 추상적이며 법제적입니다. 즉 경제생활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조절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만들어진 공동의 제도들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로 묶여 동일한 원칙들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제휴를 만들려는 구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중세말 유럽 북부의 자유 도시들을 재편하였던 동맹의 이름을 따서 '한자 구상 la conception hanséatique'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한자동맹은 실제로 경제적이며 법률적인, 게다가 정치적이기까지 한 하나의 강력한 실체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는 영토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없었으며, 바다를 개방한다든가 교역을 원활히 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연계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두 구상은 점차 서로 융합되어왔고, 오늘날 전례없는 창조와도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여타의 전체 주변국들 사이에서 오직 프랑스만이 우선은 영토에 의거하는, 그리고 그 다음엔 프랑스 자신이 그 중심부를 구성하는 영토

에 의거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심부의 교차점인 생 앙드레의 십자로는 에딘버러에서 아테네, 코펜하겐에서 지브롤터에 이르기까지 그 가지들을 뻗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프랑스인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강한 원형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프랑스 민족 자체가 생성되었던 방식의 연장과도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주변의 국가들에게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공간의 보존과 결합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공동체 정책을 제안하고 때로는 강요하기까지 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공동 농업정책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의 일정한 균형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 둘째는 지역정책으로, 이는 부유한 지역으로부터 빈곤한 지역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인 이양을 통해, 유럽지역 내의 보다 큰 동질성을 촉진시키고, 특히나 공동체 영역 한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는 경제적 하부구조의 물리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상 영토와 관련된 위의 두 가지 정책이 현재 공동체 예산의 80%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는 이 정책들의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번째 논점, 즉 관세국경의 보호라는 논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개방적인 구상인 '한자 구상'이 좀 더 제한적인 영토적 구상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트의 연속적인 라운드에 의해 하락된 공동체의 관세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듭니다. 또한 '유럽의 요새'라는 신화를 주축으로 한 미국의 선전공세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대 경제 열강들 중에서 유럽 공동체가 월등히 가장 개방적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이 공동체의 국민 총생산(PIB)의 25%에 해당하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10%,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8%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말에 이르러 공동체 내부시장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유럽 공동체의 관세율은 지금처럼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고 - 아마 우루과이 라운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특히 개발도상국가

들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특혜 관리도 계속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내부시장의 완성은 다만 회원국들 사이에 이제까지 존재해 온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장벽이 사라질 경우 제3의 국가들도 동등하게 이익을 보게 되며, 또한 그들의 기업들 역시 때로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단 한번의 설립이나, 단 하나의 '교두보'의 확보만으로도 기업들은 차후로 12개 회원국들의 전체 시장에서 무리없이 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토에 관련된 기본적 구상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 짓기 이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그 문제가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새로운 중요성을 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으로 인한 공동체의 지리적 확장에 관한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동질적이면서도 경계가 확실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걸맞게, 프랑스는 자연히 동구 여러 국가들의 때이른 가입이 혹 전체 공동체가 통합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빛나가게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공동체가 일종의 '각종 메뉴가 다양한 유럽'처럼 되어 각개의 국가들이 부채살처럼 펼쳐진 공동체의 정책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들을 뽑아 가면서도 진정한 통합을 가능하게 해 줄 규칙 전체에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이 마스트리히트에서 어느 정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면 공동체의 전체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존중하게 될 몇몇 국가들로 묶인 중심핵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적어도 세 개 정도의 동심원이 벌어지는 '성운 공동체'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첫째 동심원에는 유럽 자유무역 연합 Association Européenne de libre-échange - 예를 들면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 에 소속된 나라들로 비교적 짧은 적용기간 동안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은 국가들이 모일 것이고, 둘째 동심원에는 아마도 영국처럼 공동체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유럽의 예외에 있기로 선택한 국가들이 모일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번째 동심원에는 정치적인 결속 상의 이유로 공동체의 회원이 되긴 했지만 경제적 적용 상

의 이유들로 인해 기한없이 예외적인 관리의 특혜를 보게 되는 공동체의 회원국들인 동구권 국가들이 모일 것입니다.

프랑스는 선 대기, 후 수용의 기능을 수행할 유럽 기구를 공동체 밖에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의 응집력이 각양각색인 이해관계들 사이의 대립을 견디어 낼 수 없으며, 공동체의 기구들이 그러한 법률 상의 복잡성을 견디어 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럽연방에 관한 미테랑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약간은 과장하여 영토의 문제라 이름붙였던 논의를 끝맺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국 구상'이 '한자 구상'과 대립되고 있는 또 하나의 논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생활에 공동체가 개입하는 정도와 성격의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아마도 공동체가 위원회의 행정력과 사법부의 사법력을 배경으로 경쟁법칙의 준수와 시장력에 의한 자유경쟁의 확보를 지향하는 단순한 조정기능에 머물지 말았으면 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공동체가 그러한 조정기능을 넘어서 산업과 사회 분야에서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 주었으면 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이 점에 있어 대체로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산업 정책의 분야에 있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나 적극적인 공세에 착수하려 할 때마다 프랑스는 공동체의 틀에서 벗어나 그때 그때의 상대에 따라 별개의 기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유레카의 창설에 따라 실시된 연구, 유럽 우주 통신사, 아리안 에스빠스와 합작한 에스빠스의 창설, 에어버스와 합작한 아에로노미끄, 그리고 유로디프와 합작한 핵에너지 협회 등 단지 몇개의 예만을 들더라도 그러한 점은 확실해집니다.

최근 마스트리히트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프랑스는 마침내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이 공동체의 관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그점은 정상회담 중에 제기된 쟁점들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사회정책에 관한 합의 밖에 머물기를 고집했으며, 이로 인해 그러한 합의의 구체적인 시행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산업정책의 새로운 활동들이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채택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 때

문에 이 규정의 실행영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중인 1999년 1월 1일에야 시행될 단일통화라는 원대한 목표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필요 이상 엄격한 일련의 구속의 틀 속에서 공동체와 회원국들의 정책 - 특히 인플레이션과 예산정책에 있어서 - 을 압박하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점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에 대한 배려에 가장 큰 우선권을 줄 경우 - 물론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 그것이 내적으로는 완전고용을 재창출하며 외적으로는 동유럽이나 지중해 지역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질적 정책들과 양립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목표들 역시 공동체의 존립과 정통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스트리히트의 협정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활동이 지니는 조정자적 구상의 새로운 부상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여러 다른 구상들이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공동체의 존재 자체, 그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두 국가의 연대성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존립의 제일요건이 갖는 필연성이나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면 그것은 유럽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즉 독일통일로 인해 마찰들이 생겨난 이후로 독일 마르크화와 독일연방은행의 점증하는 비중이 프랑스의 경제운용에 있어 야기한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깊은 일치점을 보여 주는 정치적 통합의 협정을 주도적으로 그외 회원국가들에게 제안하고, 그럼으로써 주요 안전에 대한 깊은 일치점을 보였던 것은 다름아닌 공동보조를 취한 프랑스와 독일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정치적 통합과 공동 방위의 분야에 있어서 마스트리히트에서 달성된 결과들이 소극적이었고 또 불완전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소극성들이 프랑스와 독일의 책임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히 일을 더욱 멀리까지 진척시키려

했었고 또한 프랑스-독일 연합군을 창설하겠다는 상징적인 - 아마도 충고에 해당할 -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러한 의지를 명백히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스트리히트 회의의 참여국들은 그러한 문제 전반을 다시 토론하기 위해 1996년에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정치적 통합의 달성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완수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트리히트에서는 특히 하나의 금기가 깨어졌습니다. 유럽 공동체는 그때까지 간혀 있었던 엄밀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위생, 교육, 문화, 치안과 법제 업무, 외교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의 영역에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통합과 특히 점차로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될 외교정책이 제기 능을 하게 될 경우, 장기간에 걸친 자성과 자문의 단계를 거친 후에 유럽 공동체는 공동체 외부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동구와 남유럽이라는 양 측면에 대한 공동체의 역량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과의 관련 하에서만 비로소 공동체가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가 드러날 것이며, 그리하여 말하자면 공동체의 모든 능력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김갑수 역>